

연구하는 과학자, 정치하는 과학자가 따로 있다?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과** 학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선진화시킵니다. 한국의 몇몇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국가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과실연,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열일곱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통합은 기정사실화됐다.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비편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과학계가 겪은 내홍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지난 2월 19일에는 이러한 내홍이 총집합된 사건이 터져 나왔다.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이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또 서한을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일이었다.

아마도 우리 나라 과학계 역사상 대통령(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기를 든 것은 최초의 일일 것이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111명의 과학자가 서명을 했다는 것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다. 과실연측은 18일 아침까지 40여명에 불과하던 서명자 수가 오후 2시에 100명을 넘어섰으며 성금을 보낸 인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이 컸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눈길은 냉랭했다. “이미 다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반대하면 어찌자는 얘기냐”는 것이다. 실제로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은 주요 언론에서 기사화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월 18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08년 2월 18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08년 2월 25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스스로를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과학기술계

그렇다면 과학계의 목소리는 왜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까. 과실연구이 공개서한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자료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계는 ‘우리가 안 나서도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정치권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안이한 자세로, 또는 ‘과학기술자가 어떻게 머리띠를 매고 길거리에 나서나, 이미 결정된 것 우리가 나서도 소용없어’ 라는 패배적인 생각으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랬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온실 속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과학자 우대는 과학자 스스로를 대우받는 엘리트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어느 집단이든지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힘을 가져야 하는데 과학자 스스로를 이익 집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지난 달 한국에 들렀다가 과학기술부 폐지안에 충격을 받은 이종문 암벡스 벤처그룹 회장은 새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의 부당성을 설득했으나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고 한다. 과학기술계는 별저항도 없이 조용한데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교육부와 통합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종문 회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의 횡적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하고 정치·사회적인 의식과 영향력이 작아 이번 사태처럼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로서는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니 솔직히 힘이 빠지는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고 국회를 방문했으며 서명운동도 벌였다.

과학자들, 과학적 원칙 바탕으로 의견 표명 시작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연구하는 과학자 따로, 정치하는 과학자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주축이 돼 힘을 합쳤다는 것이다. 111명의 서명자에는 유 룡 KAIST 교수, 신희섭 KIST 박사과 최진호 이대 교수와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까지 국가과학자에서 젊은 여성 과학자까지 참여했다. 과거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혹은 괜히 참여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은 극복되고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인들이 그 동안 집단적이지 못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과학기술자의 자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직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점점 합리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과학자들이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5년 뒤의 정권 교체기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SD**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 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